

부서지고 무너지고...항일 사적지 방치 광복절 앞두고 자긍심도 무너져 내린다

광주·전남 사적지 4곳 가보니

하순 충의영당 폐허 그 자체
안중근 의사 기린 장흥 해동사
광주 어등산 호남의병 전적지 등
비석 가리고 칠 벗겨진 채 훼손
안내판·이정표도 찾을 수 없어



하순 충양면 충의영당 및 춘산사 사당 입구 문이 부서져 있다.



장흥 장동면 해동사암 비석주변을 호박 넝쿨이 덮고 있다.



어등산 의병 전적지 안내문이 떨어져 있다.



의병장 토굴 옆 태극기가 훼손돼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올해 초 3·1 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내 항일 사적지 정비 계획을 발표해 놓고도, 광복절을 수일 앞둔 현재까지 사적지 정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반일 운동과 항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적지 방문 열풍까지 불고 있다는 점에서, 항일 사적지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12일 광주·전남의 대표적 항일 사적지로 안중근 의사의 영정·위패가 모셔진 장흥 해동사를 비롯한 하순 충의영당 및 춘산사, 광주 어등산 호남의병 병 격전지, 곡성 오강사 등 4곳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4곳 사적지 모두 찾아가는 과정에서 녹록치 않았다. 마을 입구에서 사적지로 가는 안내판이나 이정표를 찾을 수가 없었다. 또 일부 사적지는 문이 깨져있거나 기와가 무너져 있고, 칠이 벗겨져 있기도 했다.

하순군 충양면 부곡리 '충의영당 및 춘산사'는 폐허 그 자체였다. 이곳은 1906년 을사조약에 항거해 의병을 일으킨 애국지사 문달환 선생을 모시기 위해 조성된 사당이지만, 문들은 떨어져 벽에 기대 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다.

방문객을 처음 맞는 입구 옆에는 올해 4월부터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적혀있지만, 내부에는 어느 한곳도 공사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장흥군 장동면에 있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해동사'도 관리가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1955년 건립된 해동사는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3월 12일에 추모 제향을 봉행하는 국내 유일의 사당이다.

하지만 사당입구 기둥은 물론 영정과 위패를 모시는 사당 본건물 기둥까지도 칠이 벗겨져 있었다. 특히 사당 앞 비석 입구는 호박넝쿨로 가려져 비석으로 접근은커녕 비석 자체를 제대로 보조차 힘들었다.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의 '한말 호남의병 전적지'는 찾아가는 길부터 험난했다. 이곳은 김태원·김을 의병장 등 의병 수백 여명이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전사한 장소로, 호남 의병의 한이 서린 곳이다.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 40

분간 산 중턱을 오르고 나서야 구한말 의병 전적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겨우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안내판마저도 고장해 놓은 실리코니가 훼손돼 지금 당장이라도 바닥에 떨어질 듯 험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

김태원 의병장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토굴 앞 안내판은 훼손돼 곧 떨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고, 바로 옆 태극기는 흙먼지와 곰팡이로 덮혀있었다.

이날 찾은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오강사'는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오강사는 항일 투쟁에 앞선 의병 면암 최익현과 조우식의 시체를 지내는 사당이다. 오강사 문 앞에 적힌 관리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뒤에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사당 안에 모셔야 할 최익현, 조

우시 선생의 영정은 온데 간 데 없었다. 관리인은 10여년 전 도둑이 들어 쌀 등을 훔쳐갔고, 방범시설이 설치 되지 않은 곳에 영정을 둘 수 없어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당 내부를 둘러보니 곳곳에 무너진 기와조각과 노후화된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다. 도저히 현충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관리인은 "지난해부터 군정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2일 국가보훈처와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총 934곳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각각 14곳, 115곳 등 129곳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주요 현충시설 118개소, 국외 주요 독립운동 사적지 24개소를 점검·조치한 결과, 대부분의 사적지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수가 필요한 사적지들은 지자체 및 관할 보훈관서와 연계해 올해 연말까지 보수작업을 완료하고, 주기적으로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순·장흥=정병호 기자 jusbh@

/곡성=김민석 기자 mskim@

전두환 명예훼손 재판 증인 신청 공방

다음달 2일 재판 5·18 당시 군인들 법정 설치 관심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씨의 재판이 12일 광주에서 열렸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 등 4명이 39년 전 목격할 헬기 사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었으나 중복되는 증언을 제외해 이날 법정에는 1명만 출석했다. 검찰은 재판 초기 헬기 사격 목격자 21명(생존 17명·사망 4명)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고 변호인측이 증거 인정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 대부분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올해 5월부터 총 4차례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법정에서 선 15명은 1980년 5월 21~22일 또는 항쟁이 끝날 무렵 옛 전남도청 인근이나 광주전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

자를 공식 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의 5·18 보상결정문 사본 열람을 요청했다. 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지목된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내용이고, 조종사 중 일부는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은 점,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 무장헬기와 전자 동원 명령을 하달한 점이 다른 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보다는 군 문서 등에 대한 서증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22일 광주로 출격하는 헬기에 탄약 2000발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500발이 비었다고 진술한 육군 31 항공단 출신 최중호씨와 5·18 연구 교수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불복 항고

법원도 자료 미전달 실수 인정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고, 법원도 일부 착오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의원이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

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 착오로 자료가 재판부에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 측이 제출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 수사기록 등 책 12권 분량의 자료를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를 거쳐 재판부로 전달하는 과정에 법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수로 일부가 누락됐다는 것이 법원 측 해명이다.

한편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폐기물 높게 쌓은 트럭 육교에 '쿵'...교통 통제 한바탕 소동



○...폐기물을 높이 실은 트럭이 광주시 동구 전 남영고 인근 육교에 걸려 육교하부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교통이 통제되는 등 한바탕 소동.

○...1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동구 대인시장-전남영고 간 제봉로 중앙육교 하부에서 가로 50cm·세로 80cm·두께 5cm 크기 콘크리트 블럭이

도로로 떨어지고 일부 철재 구조물이 파손돼 동구가 긴급 보수에 나섰다.

○...당시 폐자재 등을 실은 트럭이 지나가다 제한높이 4.4m 육교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구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파손된 육교의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보수·보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성희룡 논란 김훈 목포시의원 제명

의원직 상실...성폭력 관련 광주·전남 기초의회 첫 사례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훈 목포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광주·전남 기초의회에서 성폭력과 관련해 의원이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포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전체 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의원직 징계 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해 찬

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징계안을 가결했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김 의원은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투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훈 의원은 소신발언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자신의 언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지난 9일 참석의원 7명 전원 합의로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훈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한편 피해 여성 의원이 지난달 3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이번 주부터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114002 point

J1 4point
J2 5point
J3 6point
J5 8point
J6 10point
J12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